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에 제동 건 전남도

"주민 수용할 수 있는 정부 획기적 지원대책 먼저 마련하라"
'기부 대 양여' 방식 뛰어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 요구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이전 대상지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보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와 광주시가 전남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 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전남도는 현행법상 현 광주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이전대상지를 지원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설명회 개최를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23일 "(이전 대상지가 되는) 기초 지자체와 주민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설명회 개최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담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종합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정책TF를 공동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정책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광주시와 구체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방부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례의 경우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통합 신공항 건설' 지원책이 여러 지역에서 유치 신청 할 정도로 지역 발전 효과에 대한 기대를 이끌었고, 결국 수용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전남도는 국방부와 광주시에서 이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통합 신공항 건설 효과 이상 범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지역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삶과 후손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수긍할 만한 대안 마련에 국방부와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해수욕장 폐장…파라솔 건조 작업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로 전남을 비롯한 전국 모든 해수욕장이 23일 긴급 폐장했다. 23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개장 기간 피서객들에게 대여했던 파라솔을 창고에 보관하기에 앞서 햇볕에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불법거래 꼼짝마

광주 지자체·경찰·국세청
24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유관 기관들이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자치구 합동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부동산 불법거래 유관기관 합동 단속 ▲부동산 단속 전담 수사인력 배치 ▲홍보 및 교육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검증 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 기간은 24일부터 연말까지이다.

시 안팎에서는 다운 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성행한다는 민원이 온라인 등을 통해 이어졌다.

시는 공인중개업소,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에는 전담 수사 인력 2명을 배치해 분양권·청약 불법 거래,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검증은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동향과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상시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캠페인도 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저수지 준설 등 74억 요청

집중호우 저수지 등 225곳 피해
정부에 대체 급수시설비 요구

전남도가 집중호우에 따라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피해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체 급수시설 사업비 74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남 도내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농업기반시설의 피해는 저수지 45개소를 비롯 양·배수장 69개소, 용배수로 111개소 등에서 파손 및 유실, 침수로 피해액만 206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전남도는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해 굴삭기 236대와 덤프 33대를 동원해 응급복구를 추진했으며,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조기에 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저수지의 경우 제방 유실과 상류지역 토사유입에 따라 유효 저수량이 감소하고, 하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토록 만든 양수장과 취입보가 큰 피해를 입어 복구 완료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담양, 곡성 등 도내 14개 시·군에 투입할 ▲저수지 준설 107개소 53억원 ▲간이양수장 10개소 17억원 ▲관정 등 5개소 2억원 등 사업비 74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요청했다.

또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시설물점검 119센터와 합동으로 저수지, 배수장 등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기반시설 피해가 광범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 만큼 대체 급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물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음식문화큰잔치' 내년 연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도민 건강·안전 지키기

전남도는 오는 10월 여수에서 개최 예정인 '제2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년으로 순연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데다 광주·전남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지난 1994년부터 이어져 온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음식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남도음식 관련 산업을 육성 및 홍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 지역 대표 인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년 순연 개최될 여수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해안관광벨트 음식 홍보관 운영을 비롯 옛 이야기가 있는 오감만족 힐링 축제, 맛보고 체험하는 푸드 트립(food trip) 등 프로그램을 '위드(with) 코로나'에 발맞춘 콘텐츠 개발로 준비 중이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3일간 강진 생태공원일원에서 열린 제26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4만9000여 명이 방문한 바 있다.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며 "위드(with) 코로나에 대비한 콘텐츠 발굴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내년 더욱 성숙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로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16개 해수욕장 조기 폐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난 22일 자정부터 전국 모든 해수욕장이 긴급 폐장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미 완도 신지명사십리 등 도내 16개 해수욕장을 조기 폐장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전남·충남·강원·제주를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108개 해수욕장이 22일 밤 12시부터 긴급 폐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탈의시설 운영과 파라솔(차양시설)·물놀이용품 대여 등을 중단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개장한 전국 251개 해수욕장 중 143개가 앞서 폐장했다. 이 중 부산, 인천, 전남 등에서 운영하던 28개 해수욕장이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격상 등에 따라 조기에 문을 닫았다.

완도 신지명사십리 등 10개 해수욕장은 지난 20일 운영을 중단했으며, 여수 방죽포, 보성 율포솔밭 등 6개 해수욕장도 21일 문을 닫았다.

전남도는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방역인력은 이달 말까지 배치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는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남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7월 10일부터 총 51개소가 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21일 기준 47개소가, 23일 여수 웅천 등 4개소가 폐장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금호 2동 등 일부 지역 26~27일 수돗물 공급 중단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금호2동 등 일부 지역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

23일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금호 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수도관 점검 등을 위해 수돗물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

단수 예정 시간은 26일 오후 10시부터 27일 오전 6시까지이다.

시는 단수 지역 내 24개 아파트 등에 담당 직원을 배치해 흐린 물이 나오는 상황에 대비하고, 아파트 저수조 유입 밸브를 조절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